

## 기업의 대북 투자 전략

이태섭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남북 경협 활성화를 가로막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투자 리스크는 크고 수익성은 작아 기업의 대북 사업이 제약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한 번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모두 해소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남북 경협은 그 여건이 개선되는 데 따라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확대 발전되어나갈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대북 사업은 장기적인 비전과 단계적인 전략을 갖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우선은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업 간 공동 진출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리스크 관리 차원이나 대북 협상력 측면에서 볼 때, 기업의 개별적·경쟁적 접근 방식보다는 기업간의 집단적·협력적 접근 방식이 보다 유효할 것이다. 사업별 또는 업종별의 중소기업간 공동 진출도 가능할 것이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우리 기업과 외국 기업의 공동 진출도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대기업이 공단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이 생산 설비를 투자하여 공동 입주하는 방식은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대북 투자 진출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경제공동체를 지향한다면, 기업의 대북 사업은 기업만의 과제가 아니라 정부의 과제이기도 하다. 전력, 도로, 철도, 항만, 통신 등 북한의 SOC 지원과 투자보장협정 등 각종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로서, 그것은 기업의 대북 사업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실현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경협 활성화 정책은 당장의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의 높은 물류 비용, 기업의 자금 부족, 북한산 제품의 판로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 금융적 지원이 필요하며, 대북 사업체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도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 차원의 남북 경협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남북 경협의 진정한 실질적 주체는 민간 기업이며, 정부의 역할은 남북 경협이 민간 기업의 주도 하에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의 대북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 지원하는데 있다. 게다가 대북 진출 기업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개발하는 벤처 중의 벤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 경협의 활성화를 추구한다면, 정부는 무엇보다 대북 벤처 인큐베이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박정희 정부의 수출 기업 육성책이나 현 정부의 국내 벤처 기업 육성책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대북 사업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육성 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근본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 문제 제기 : 경협 장애 요인과 정상회담

은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경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자못 크다.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정치·경제·군사·통일 문제 등을 포괄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실질적인 합의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의제는 교류 협력, 특히 경제 협력 분야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제 협력 문제는 남북 양측의 공통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물론 남북 경협의 대상, 규모, 방식 등에 있어 남북 양측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정상회담은 큰 틀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후속 실무 협상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과연 어느 수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협은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베를린 선언에 비추어볼 때, 북한의 농업 및 SOC 지원 분야에서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정상회담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상회담은 그 자체로서 민간 차원의 남북 경협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상 회담 이후 남북 경협 전망은 비교적 낙관적이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과 과도한 기대는 현실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

문이다. 투자 보장 등 제도적 장치 결여, 북한의 열악한 SOC, 대외 경제 협력을 위한 북한의 법·제도·자세 미비, 과다한 물류 비용, 기업의 자금력 부족, 제품의 판로 문제, 남북 관계의 불안정성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로 인해 투자 리스크와 불확실성, 비용 부담은 크고 수익성은 작아 기업의 대북 사업이 제약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북한 특수로 이어지는 남북 경협 활성화는 그 현실적 제약 요인을 해소해나가는 과정과 궤를 같이할 것이다.

여기서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우선 투자보장협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북한의 SOC 지원, 남북 관계의 불안정성 해소 등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기반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먼저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에 기여함으로써 남북 관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북미 관계와 북일 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면, 남북 경협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투자 보장, 이중 과세 방지, 분쟁 조정 절차, 청산 결제, 산업 재산권 보호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는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위원회 가동이 합의되면 실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북한이 정상회담을 수용한 것은 경제 실리 획득을 위한 것이겠지만, 이

것을 실용주의로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변화 방향은 기존의 시스템 내에서 실용주의적 개혁과 개방이 확대되는 길이지만, 그것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북한의 수용 능력을 고려할 때,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외 경제 협력을 위한 북한의 법·제도 정비와 자세 변화도 이와 마찬가지로 가질 것이다.

SOC 지원의 경우 북한의 수용 능력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우리 정부의 재원 조달 능력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의 SOC 확충을 위한 투자 소요 규모를 정확히 추정하기란 쉽지 않은 듯하다. 산정 기준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추정치가 나오고 있다. 대체적으로 매년 작게는 10억~20억 달러에서 많게는 40억~50억 달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의 정책 변화, 북미·북일 관계 개선 등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볼 때, 소요 자금의 상당 부분은 국제 기구 등 해외로부터 조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국내에서, 그것도 대부분 공적 자금으로 조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재원 조달 능력과 대북 지원 능력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 IMF 국제 금융에서 벗어나고 있는 우리 경제의

부담 능력과 국민적 여론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소야대 정국 하에서 야당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난 4월 말에 있는 여야 영수회담의 공동 발표문에 따르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국민의 부담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기업의 자금력도 여전히 문제이다.

이렇게 볼 때, 경협 활성화의 현실적 장애 요인들이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모두 해소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남북 경협은 여건이 개선되는 데 따라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확대 발전되어나갈 것이며, 따라서 현실적 여건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점진적이며 현실주의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 기업의 대북 사업 목표와 유망 협력 분야

### 단기적 목표와 유망 협력 분야

현실적 여건과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의 대북 사업은 장기적 비전과 단계적 전략을 갖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기업의 대북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 먼저 유망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단계별 목표와 방향에 대해 살펴보자.

기업의 대북 사업의 목표는 경쟁력 제고와 시장 확대 등을 통한 수익성 확보에 있다. 물론 남북 경협은 자본주의 세계시장경제체제에서 북한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시장 확

대에도 기여하는 남북 공영의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 경협은 남북한 산업간의 상호 보완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은 남북한의 산업 구조 조정과 연동될 것이다.

현재 북한의 산업은 전력 등 에너지 부족, 원자재 부족, 외화 부족, 식량 및 생필품 부족, SOC 부족, 설비 노후화, 생산 및 경영 기술 낙후 등으로 인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북한의 구매력과 대금 결제 능력을 고려할 때, 북한의 내수 시장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나 경쟁력있는 생산 요소는 저렴한 노동력과 토지, 그리고 비교적 풍부한 자원이다. 따라서 북한은 노동력과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남북 경협 역시 이러한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시장 확대라는 목표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 북한의 내수 시장을 염두에 둔 제조업 진출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그것은 북한 경제가 회복되고 소비 시장이 확대되는 데 따라 중장기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결국 단기적으로 북한은 남한의 내수 시장이나 중국 등 제3국 시장으로의 수출을 위한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對중국 수출이 가능한 품목을 중심으로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해 북한 지역에서 경쟁력있는 제품을 생산할 경우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데 따라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둔 서방 자본의 대북 진출도 예상된다. 지금은 북한산 제품의 미국 등 서방 시장으로의 수출이 제한되어 있지만,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데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산 제품의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우리 정부의 북한 SOC 지원이 추진될 경우, 건설업은 공공 수주를 통한 북한 지역으로의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이며, 시멘트 등 건자재 산업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일 것이다.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에서 볼 때, 남북 경협이 1차적 대상은 노동 집약적 산업의 생산 설비를 북한 지역으로 이전·확대하여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분야가 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노동력과 자원에 기반하여 수출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섬유, 의류, 신발, 가죽, 가방, 완구, 목재, 출판, 인쇄 등 경공업 분야와 전기·전자 제품 조립 등이 대상이 될 것이다.

그동안 임금 경쟁력에 의존해왔던 많은 중소기업들이 IMF 구제 금융 이후 경기 불황과 산업 구조 조정을 겪으면서 한계에 직면하자 새로운 생산 기지 확보를 통한 활로 모색을 위해 대북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고임금과 지가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

되고 있는 한계 산업의 유희 설비를 북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최근 남한의 산업 구조가 지식 기반 경제, 디지털 경제로 전환함에 따라 성장 한계 산업은 경공업뿐만 아니라 중공업 분야를 포함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북한의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위주로 하여 투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경공업에서 북한이 희망하는 투자 유치 분야는 비누, 제지, 신발, 의료용품 등 생필품 분야와 소금, 설탕, 제과, 제빵, 조미료(장류), 기타 농수산물 가공 등 식료품 분야이다. 이것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금 결제만 정확히 보장되면 수익성이 있는 투자 분야이다. 그러나 북한의 대금 결제 능력을 고려할 때, 북한의 내수 시장을 겨냥한 경공업 투자는 아직 리스크가 큰 편이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북한 내수 시장이 발전될 가능성이 있어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분야도 있다. 음식료품, 생필품, TV 등 가전 제품, 자전거, 시계, 카메라, 재봉틀, 화장품, 음향 기기, 카세트, 통신 기기와 같은 내구재 등에서 내수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의료용품, 소금, 생수, 담배, 버섯 등 임산물, 농수산물 가공 등 남한으로의 반입이나 제3국으로의 수출을 위주로 할 경우 이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

분야에서는 현금 작물이나 특용 작물을 중심으로 비료·농약·농업용 비닐·종자·농기구 등 영농 자재를 지원하고 생산물로 상환 받는 '계약 재배'나 '위탁 재배'가 관심의 대상이다.

북한의 자원 개발도 유망 투자 분야이다. 북한에는 철, 금, 은, 동, 연, 아연, 니켈, 티타늄, 우라늄, 석탄, 중석, 석회석, 흑연, 고령토, 마그네사이트 등 자원이 풍부하며, 이들 자원은 북한의 주요 수출 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력, 수송 등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석탄 채굴 유희 설비와 같은 채굴 관련 설비의 대북 이전을 통해 북한의 자원 개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시멘트와 같은 전자재 산업과 요업 등도 협력 가능 분야이며, 관광 자원도 계속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에 기반한 봉제, 의류, 신발, 가죽 등 경공업 분야와 전기·전자 제품 조립, 지하 자원 및 관광 자원 개발, 시멘트 등 전자재 산업과 비철 금속 등의 분야가 북한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장기적 목표와 유망 협력 분야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 조정 차원에서 조선, 자동차, 철강 금속, 기계, 화학 등의 중화학공업 분야가 유망 협력 대상이 될 것으

로 전망된다. 이 단계에서는 중간 기술에 기반한 자본 집약적 산업 분야의 생산 기지가 북한 지역으로 이전·확대될 것이다. 자동차, 조선, 기계 등 단기적으로 부품 생산이나 조립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분야도 있을 것이다. 경공업은 포함에서 완제품의 판로 문제에 애로가 있을 경우, 최종재 또는 완제품 생산보다 중간재 또는 부분품 생산이 유리할 수도 있다.

물론 철강 금속, 기계, 화학 등 중공업 분야의 경우, 북한의 중공업이 군수 산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군사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남북 협력에 일정한 제약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북미·북일 관계 개선을 轉機로 하여, 남북 경협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것이며, 이 시점에서 북한 특수는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다(여기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북일 관계 개선을 경계선으로 하여 남북 경협의 발전 단계를 단기와 중장기의 2 단계로 구분하였다).

중화학공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군수로의 전용 가능성이 없는 분야에서부터 부분품 생산, 조립 등의 형태로 상호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생산 기지의 대북 이전·확대를 통해 중화학공업 분야가 남북 경제 협력의 핵심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단계에서 시장은 남한 내수 및 제3국 수출뿐만 아니라 북한 내수 시장으로까지 확

대될 것이며, 북한의 석탄 화학 공업은 석유 화학 공업으로 전환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노동 및 자본 집약적인 중·저부가가치 산업은 북한 지역으로의 이전·확대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가진 수출 산업으로 육성되고, 남한은 기술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 구조가 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민족 공영의 남북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남북 경협은 북한의 산업 기술력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기술 혁신의 주역은 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이다. 지금은 전자 및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은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이다. 따라서 남북 경협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이 분야는 북한이 자체 연구 개발 및 대외 협력에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의 하나로서, 북한의 수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이다.

문제는 바세나르체제 하에서 북한으로의 관련 물자 및 기술 이전을 금지하고 있는 항목이 많다는 점이다. 과거의 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을 대체한 바세나르 협약은 상용 무기와 민수용 및 군수용으로의 이중 사용이 가능한 품목과 기술을 전쟁 가능성이 있는 위험 지역으로의 반출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 규정이다. 이러한 바세나르 협약은 신소재, 소재 가공, 전자, 컴퓨터, 전

기·통신 및 정보 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법 및 항공 전자 공학, 해양 기술, 추진 장치 등 일반 산업용 물자 9 개 부문과 방위 산업용 물자를 통제 물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각 품목의 개발·생산·운영에 사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바세나르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전 제품 조립, 하드웨어 부품 생산 및 조립,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등 첨단 기기 생산 설비의 대북 이전과 기술 이전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컴퓨터 산업은 가장 낙후된 분야의 하나이지만, 수학 및 물리학 등 기초 과학이 상대적으로 발전되어 있어, 소프트웨어 개발 등 북한이 특화 기술이나 비교 우위를 확보하고 있고 상용화가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고 하겠다.

통신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남북한 정보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북한의 유선 통신망 구축과 무선통신시스템 구축 등 북한의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첨단 통신 장비 생산 설비와 기술의 대북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경제 협력은 투자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라도 자금 및 설비 지원과 아울러 기술 지원 및 협력에 바탕해야 할 것이며, 북한의 기초 과학 기술과 남한의 첨단 기술을 상호 협력하여 동북

아 경제권에서 한반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단기적으로는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을 중심으로 하여 자원 개발과 중화학공업, 첨단 산업 등 수익성이 있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자본 집약적인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하여 기술 집약적인 첨단 산업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북 투자 전략이 현실화되기 위한 기본 전제는 무엇보다 북한의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이다.

### 기업의 대북 진출 전략과 추진 방향

#### 대북한 SOC 지원 전략과 방향 : 放射型 전략

현재 전력, 수송 등 북한의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남북 경협 활성화를 저해하는 기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해 가장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협력 분야는 도로, 철도, 항만, 전력, 통신 등 북한의 SOC 확충이다. 물론 북한의 SOC를 한꺼번에 확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북한의 수용 가능성과 요구 사항, 재원 조달 등 우리 정부의 지원 능력, 산업 연관 효과 등 경제적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지역, 규모 등 우선 순위가 선정되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최소 비용·

최대 산출이라는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우선 순위는, 첫째 남북 경협 활성화 등 북한의 외자 유치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급한 분야, 둘째 북한의 경제 회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급한 분야, 기타 북한이 요청한 사업 분야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SOC 지원은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필요하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상부터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제품 생산과 설비·원부자재·제품의 수송에 필요한 전력, 철도, 도로, 항만 등이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긴급하고 필요 불가결한 분야가 바로 전력, 그리고 남북한의 도로, 철도 등 육로 교통망의 연결이다. 군사적 문제로 인해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통제 용이성 등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도로보다 철도가 먼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 철도망 연결과 경의선 복선화는 김일성의 유훈으로서 북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경의선 철도망이 연결될 경우, 남북 경협에 있어 남포-수도권간의 철도 운송비는 현행 남포-인천간 해상 운송비의 1/3 이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높은 해상 물류 비용이 남북 경협의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을 약화시키며 경협 확대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점에서, 철도 운

송을 통한 물류비 절감은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하며 남북 경협을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게다가 남북 철도망이 연결되고 이것이 중국 횡단철도(TCR),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만주 횡단철도(TMR) 등을 통해 유럽으로 연결될 경우, 장기적으로 중국, 러시아, 유럽 등과의 교역에서 물류 비용 절감을 통해 한국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경제권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틀에서 보면, 한반도는 지경학적으로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에 있으며, 특히 동북아 교통 물류의 중심에 있다. 특히 북한은 동북아 경제권에서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통 물류의 요충지이며, 우리가 대륙으로 진출하는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경제공동체가 궁극적으로 동일 시장 개념으로 북한 경제에 접근하는 것이라면, 북한의 SOC 지원은 단순히 시혜적인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륙 진출과 교통 물류 입국, 한국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내적 인프라 구축과정이란 보다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사고가 요구된다. 북한은 한국의 배후 생산 기지, 유회 수출 기지, 대륙 전진 기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다음으로 북한 지역 내의 SOC 지원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물론 북한 SOC 지원이 북한에 대한 정부의 장기 저리 차관 공여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가



능성을 배제할 경우, 우선 산업 분야별 또는 지역별 분산 투자는 파급 효과와 효율성이 없을 것이다. 효율성을 고려할 경우, 산업 연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특정 산업 분야나 특정 지역(공단 등)에 집중 투자하면서, 이를 주변 지역과 산업 분야로 점차 확산해 나가는 放射型 방식이 유리할 것이다. 이것은 곧 기업의 유망 투자 지역 선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 기업의 투자 유망 지역과 공단 개발 전략

동북아 경제권을 염두에 둔 우리 기업의 대북 유망 투자 지역은, 북한의 대외 개방적인 산업 입지를 고려할 때, 항만을 낀 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동서 두 축으로 탐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국을 중심으로 한 환서해 경제권에 대응하는 북한 서해안 지역 개발로서, 해주·개성, 평양·남포, 신의주 지역이 있다. 둘째, 중국의 동북 지역과 러시아의 극동 지역, 일본의 서북부를 중심으로 한 환동해 경제권에 대응하는 북한 동해안 지역 개발로서, 원산(금강산, 통천)·함흥·김책, 청진, 나진·선봉지역이 있다. 이들 지역은 나름의 산업 기반을 가진 북한의 주요 산업 지구들이다.

동해안의 경우 원산(조선, 비철금속), 함흥(비료, 화학, 섬유, 전기 전자, 비철금속), 김책(철강), 청진(철강, 비철금속, 기계, 화

학)은 북한의 중화학공업 지구로서 지하 자원(예컨대, 철-무산, 유색 금속-검덕, 마그네사이트-단천 등)이 풍부하다. 따라서 이 지역은 지하 자원 개발과 중화학공업의 유망 협력 지역이다. 북한이 경제 특구로 지정하고 있는 나진·선봉지역은 물류 중계 수송과 관광 지역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이며, 제조업이 진출하기에는 입지가 양호하지 않지만, 물류, 관광, 수산물 가공, 요업 등의 분야는 신중히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동해안 지역에서 산업 입지가 가장 양호한 지역은 원산이다. 원산은 북한이 보세가공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관광, 경공업과 전기 전자 조립, 수산물 가공, 조선, 그리고 일본 시장을 염두에 둔 업종의 유망 협력 지역으로 잠재력이 있다.

서해안에서 해주(시멘트, 비철금속, 제분)·개성(식료품, 방직) 지역은 남북한 육로 교통망이 연결될 경우, 서울 수도권을 염두에 둔 농수산 식료품 생산과 가공, 경공업 및 전기·전자 등의 업종에서 유망한 협력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양·남포 지역은 북한에서 기반 시설이 가장 양호한 지역으로서 섬유 의류 봉제 등 경공업(평양), 전기·전자(평양, 남포) 및 정보통신(평양), 식료품(평양, 남포), 기계(평양), 조선(남포), 시멘트(평양), 비철금속(평양, 남포), 철강(남포) 등 경공업과 중공업이 집중된 종합 산업 지구이다. 이 지역은 서해안 무역 전

진 기지로서 對중국 및 동남아 수출 산업 기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신의주 지역은 평양·남포 다음으로 산업 입지가 양호한 북한의 경공업 지구(섬유 의류, 제지, 기계, 전기·전자)로서, 경공업과 전기·전자 등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전진 기지로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때, 유망 협력 지역으로서 산업 입지와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평양·남포, 신의주, 원산 지역 순이며, 남북 육로 교통망이 연결될 경우 해주·개성 지역이 유망 협력 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기업의 대북 투자 희망 지역 선호도와 대체로 일치한다. 따라서 1차적인 유망 협력 지역은 서해안 축이 될 것이다. 물론 동해안에서도 통천공단을 포함한 금강산 개발은 유망 협력 대상 지역이다. 원산은 북한이 보세가공구역으로 공식 지정할 때까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서해안 축에서 북한의 정책적 우선 순위 등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가장 유망한 협력 대상 지역은 신의주, 평양·남포 순이다. 신의주는 현재 북한이 공단 개발을 적극 추진하면서 남측 기업에 손짓하고 있는 지역이며, 남포 역시 보세가공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북한 육로 교통망이 연결될 경우 해주·개성도 북한이 수용 가능한 유망 협력 지역이 될 것이다.

남북한의 상호 희망 사항을 조합해 보면 평양·남포, 신의주, 해주가 가장 유망한 협력 지역이 될 것이다. 여기서 항만 도시인 해주, 남포, 신의주는 현재 남측 기업과 북측 사이에 공단 개발과 관련된 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며, 평양은 임가공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북한은 나진·선봉의 경제특구식 외자유치 정책이 실패한 이후, 사업 개발권과 아울러 투자 유치를 특정 기업에 맡기는 공단 개발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는 듯하다. 북한의 독자적인 외자유치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단 개발 전략은 유효할 수도 있다. 투자 효율성과 대북 협상력 제고,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로서도 대북 공단 개발 전략이 가장 유력한 대북 투자 진출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은 공단 개발 지구에 대해 자유경제무역지대와 같은 각종 우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공단 개발이 동시에 추진되든 순차적으로 추진되든, 대북 공단 개발 사업의 주요 대상 지역은 우선 남포, 신의주, 해주가 될 것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서의 공단 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물론 민간 기업이 담당할 분야도 있겠지만, 정부의 북한 SOC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들 공단지구 내에서 공단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전력, 도로, 철도, 항만, 상하수도, 통신 등 인

프라 구축부터 집중 투자되어야 할 것이다. 공단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 협력을 통한 특정 거점의 집중 개발 전략이다.

이것은 북한의 특정 지역에 대한 민간 기업의 집중 진출과 이 지역에 대한 정부의 SOC 집중 지원의 결합 형태이다. 북한 공단 개발에 있어 민간 기업이 사업 개발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공단 개발시 공공성의 측면에서 공기업과의 공동 진출 등 공적 자금의 투입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작은 규모의 SOC 사업 분야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SOC가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소규모 SOC 지원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효과성도 작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SOC 지원은 연관 효과 등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규모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단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물동량 수송을 위해 신의주 - 평양(남포) - 사리원 · 개성(해주) - 서울 등 거점(공단)을 이어주는 방식으로 서해안 축의 육로 교통망을 확충,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단선 철도에서부터 출발해서 물동량과 북한의 수용 가능성이 증대되는 데 따라 철도 복선화와 도로 확충이 가능할 것이다. 또 공단을 거점으로 하여 공단 운영에 필요한 원부자재나 식료품 조달이 가능한 주변 산업 지역으로 SOC 지원을 점차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기업의 대북 진출 전략과 추진 방식

하지만 북한에 대한 SOC 지원과 투자 보장 등 제도적 장치 마련, 그리고 공단 개발이 합의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체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대북 투자의 불안정성, 전력과 운송 등 북한의 인프라 부족, 기업의 자금력 부족, 정보 부족, 원부자재 조달 문제, 기술 지도 등 관리 문제, 통행 · 통신의 문제, 과다한 물류 비용, 대금 결제 문제, 제품의 판로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기업의 대북 진출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무엇보다 투자 리스크와 불확실성,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경제 논리에 따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기업의 대북 진출은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에서부터 시작하여 대북 사업의 경험과 북측 파트너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북한의 SOC 확충,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여건과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투자 형태도 리스크가 작은 위탁 가공으로부터 출발해서 점차 직접 투자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당분간 남북 협력은 '설비 제공형 위탁 가공 교역'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역 선정에 있어서도 전력과 운송 등 북한의 산업 기반 시설, 원부자재 공급과 기술 지도의 용이성, 물류 비용 등을 고려하여 리스크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투자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입지 선정 전략이 요구된다.

위험 감소와 시너지 효과를 위해 동종 업종이나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관련 사업이나 업종이 북한내 특정 지역(공단 등)에 업종별·분야별로 집단적으로 집중 진출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것은 기업간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정보 공유와 북한에 대한 공동 대응 등 대북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간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리스크 관리 차원이나 대북 협상력 측면에서 볼 때, 기업의 개별적·경쟁적 접근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기업간의 집단적·협력적 접근 방식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리스크 관리 차원이나 대북 협상력 측면에서 볼 때, 자금력과 정보력, 마케팅 능력을 갖춘 대기업과 관련 분야 전문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공동 진출 방식도 유력한 대북 진출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 및 정보 통신 등 북한이 희망하는 특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독자 진출도 가능하겠지만, 자금력과 정보력, 협상

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독자 진출보다 대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공동 진출 방안이 유리할 수도 있다.

물론 신발, 섬유, 완구 등 품목별 동종 중소기업체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해당 업종의 협회나 조합을 통해 공동으로 북한에 진출할 수도 있으며, 중소기업 전용 공단 건설도 추진 가능하다. 사업별 또는 업종별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 방식이다. 각 지역별로 대북 공동 진출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경쟁 환경에서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북한에 진출하기에는 많은 애로점이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간의 협력이나 공단 개발은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대북 진출에 필요한 정보 공유, 북한과의 일괄 협상, 위험 분산 등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 기업의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대기업이 공단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이 생산 설비를 투자하여 공동 입주하는 방식은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대북 투자 진출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에는 동종 업종의 집단적 진출도 가능할 것이며,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관련 업종의 집단적 진출도 가능할 것이다. 공단 조성 사업이 가시화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공단 조성과 함께 북한 SOC 지원은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특히 건설업이 그러하다. 기업이 북한의 SOC 확충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양할 것이다. 정부의 재원 조달에 참여하지 않고, 정부의 공공 수주를 통해 북한의 SOC 확충에 참여하는 방식이 있고, 직접 참여, 간접 참여, 합동 참여 등 재원 조달에 참여하는 방식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건설의 주체는 민간 건설 업체이며, 이 경우 대형 건설 업체와 중소 건설 업체의 협력이 예상된다.

또 중국이나 일본 조총련계 기업 등 외국 기업과 공동 진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완화 조치가 취해지면 미국 등 서방 기업과의 대북 공동 진출 방안도 추진 가능할 것이며, 북한의 대일 청구권 자금이 활용될 경우 일본 기업과의 공동 진출도 가능할 것이다. 또 민간 기업이 북한 SOC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참여할 경우, 리스크 분산과 자금 조달 차원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BOT 방식 등을 통해 외국 기업과의 공동 진출도 가능할 것이다. 요컨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대북 진출 방식은 기업간 경쟁을 통한 단독 진출이 아니라 기업간 협력을 통한 공동 진출 방식이라 하겠다.

## 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방안

### 대북 진출 기업 지원 방안

기업의 대북 사업에서 투자 리스크 감소와 비용 절감, 수익성 증대는 기업만의 과제가 아니다. 그것은 또한 정부의 과제이기도 하다.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부의 남북 경협 활성화 정책은 당장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나가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물론 남북 교통망 연결은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한편 북한 지역 내의 SOC 지원에 있어서도 물류 비용 절감 등 경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차원에서 평양·남포 지역의 경협 관련 SOC를 무엇보다 먼저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SOC 확충과 제도적 장치 마련, 공단 조성 등이 구체화될 때까지 정부는 우선 설비 제공형 위탁 가공 교역을 중심으로 하여 남북 경협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때 기업의 대북 사업은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남포-인천간 항로를 주된 수송 루트로 이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남포항의 컨테이너 하역 시설과 접안 능력 제고, 항만 연결 도로 확충, 평양-남포간 철도 또는 도로 확충, 평양의 대북 경협 업체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

급을 위한 전력 지원 사업(발전소 지원 또는 발전 설비, 송배전 시설, 원료 지원 등)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남포-인천간 비정기 항로의 과도한 물류 비용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해상 물류 비용은 현재 남북 경협 활성화를 가로막는 기본 장애 요인이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선박 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물류 비용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대북 업체 전체에 대한 간접 지원 형태가 될 것이다.

남북 경협 활성화를 가로막는 또 하나의 장애 요인은 기업의 자금력 부족이다. 따라서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기업에 재정 금융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형태가 될 것이다. 물론 기업 경영은 해당 기업 자체의 위험 부담과 책임 하에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가 남북경제공동체, 남북 공동경제 생활권을 추구한다면, 경협 활성화를 위해 대북 업체가 불가피하게 입은 손실의 보전, 채무 보증, 자금 대출 등 재정 금융상의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민족 내부 거래라는 측면에서 일반 국제 무역과는 달리 무관세 이상의 세제 혜택 등 제도적인 지원과 우대 조치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하고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을 전용하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대외경제협력기금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별도의 협력기금도 조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각 금융 기관이 해외 투자 중소기업체에 지원한 바 있는 해외시장개척자금, 해외투자자금, 해외시장개척기금 등과 같은 제도를 북한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한국수출보험공사는 해외 직접 투자를 행한 후 투자 상대국의 수용 위험, 전쟁 위험, 송금 위험으로 인하여 투자 원금 또는 배당금, 이자 등을 회수할 수 없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장하는 비영리 정책 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바, 리스크 보전을 통해 대북 투자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공사의 자본금 증액 등 해외 투자 보험을 확대하여 대북 투자 보험을 운영하는 방법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출보험법의 대북 적용을 위한 근거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북한산 제품의 판로 문제와 관련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부 조달 물자로 우선 구매하고, 농산물의 경우에도 해당 품목의 남한 총수입 실적을 감안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없이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며, 경협 활성화 차원에서 내국간 거래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북한산 농산물의 반입 제한 품목도 완화해야 할 것이다.

구서독의 경우 60년대에 세법 개정시(부가가치세법, 판매세법), 세법 개정이 구 동서독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동독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1967년에 부가가치세법 도입시 구 동서독간 반출입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세율을 감면시켜주는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였다. 구서독은 면세율 조정, 특정 분야에 대한 구매 확대, 산업 설비 이전, 사회간접자본 건설이나 환경 보호 등 특정한 목적과 결부된 재정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던바, 이것은 구 동서독 통일 방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대북 진출 기업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개발하는 벤처 중의 벤처이며, 따라서 정부가 평화와 통일을 추구한다면 정부는 대북 벤처 인큐베이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벤처 기업을 육성 지원하듯이 대북 벤처 기업을 육성 지원해야 한다. 물론 대북 진출 기업의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정부의 대북 경협 전략에 합당한 전략적인 지역과 업종에 진출하는 대북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와 특혜를 부여해서라도 집중 육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정부와 기업의 역할 분담

정부의 한정된 재원을 활용함에 있어, 북한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고, 대북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 이 양자는 적절히 배합되어야 하겠지

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북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간접적인 대북 지원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대북 직접 지원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남북 경협의 실질적인 주체는 민간 기업이며, 정부는 그 지원자이다. 남북 경협이 정부 차원으로 발전된다고 해서 이 대전제가 바뀌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부 차원의 남북 경협 역시 민간 차원의 남북 경협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의 역할은 남북 경협이 민간 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데 있다. 정부 주도의 남북 경협이란 오늘날의 시대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정상 회담이나 당국간 대화, 정부 차원의 남북 경협 역시 민간 차원의 경제 협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과 제도,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정부가 북한 SOC 지원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북한의 SOC 지원을 모두 도맡아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정부는 남북 경협의 주체인 민간 기업이 자신의 역할을 더욱 제고해나갈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와 민간 기업은 각기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긴밀히 협조한다. 여기서 민간 기업은 철저한 경제 논리와 수익성 원칙에 기반하여 남북 경협에서도 남북한 상호 이익

의 증진을 도모하는 윈-윈(win-win) 전략을 추구한다. 요컨대 기업 경영의 기본 원칙은 사업성이다. 이에 비해 정부의 국가 경영의 기본 원칙은 공공성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민간 기업이 하기 어렵거나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담당한다.

즉 정부는 경험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대북 투자 및 교역 절차를 간소화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 금융, 세제 등 민간 기업의 대북 사업을 지원하며, 투자보장 협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북한 SOC 지원과 같이 민간 기업으로는 하기 어려운 사업을 담당한다. 여기서 정부가 대북 SOC를 지원함에 있어 경제 논리와 사업성, 수익성, 상호주의를 잘못 적용하면 공공성의 원칙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

남북간 거래를 내국간 거래로 인정하고 진정으로 남북경제공동체, 나아가 그 궁극적 목표인 '남북 공동경제생활권'을 추구한다면, 남한과 북한을 동일 시장 개념으로 파악하여 공공성의 원칙과 지원 능력의 범위 내에서 대북 SOC 지원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에 있어 탈상호주의, 탈사업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경제 논리와 사업성, 상호주의는 기업의 대북 사업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한편 정부와 기업의 관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은 엄격히 구별되고 상호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SOC 지원에서도 사업성

과 공공성(경협 활성화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따라 사업 대상을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철도 연결이나 공단지역 내 전력 및 통신과 같이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업 대상도 있을 것이며, 공공성은 강하지만 사업성이 없는 부문도 있을 것이다.

이 때 후자의 재원 조달은 공공성의 원칙에서 정부의 몫이며, 그것은 정부의 공적 자금으로 조달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국제적 공공성이 있는 사업 분야의 경우 국제 기구의 참여도 가능할 것이다. 공공성만 있고 사업성이 없는 사업 분야를 무리하게 민간 기업에 부담시켜서는 안될 것이며, 엄격한 정경 분리 원칙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업성이 있는 후자의 경우에는 재원 조달에 직접 참여, 간접 참여, 합동 참여, 국내 기업 컨소시엄, 국제 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로 민간 자본의 유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민간 자본의 유치를 위해서는 참여하는 기업에 적절한 수익 보장, 위험 부담 분산, 각종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경협의 새로운 轉機를 맞이하면서 정부와 기업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긴밀한 상호 협력을 기대해본다. 